韓 경제성장률, 부채증가 속도 못 따라가 中企 대출 연체율 증가 등 곳곳 위기 신호



'부채 리스크' 고조

우리 정부와 기업, 가계 빚을 모두 합한 총 부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 국내외 경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가계와 기업 대출 부실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수 있어 종합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.

◆ 1분기 총 부채 6373조··· 5년새 40% ★

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(GDP)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8%로 주요 20개국(G20) 평균을 웃돌았다. 2019년 4533조원이던 총 부채가 올 1분기 6373조원으로 5년새 40.6%(1840조원) 늘어난 결과다.

1분기 GDP 대비 총부채 비율 248% 민간·기업, 부채 규모·질 악화 추세 "부실 대응 등 종합적인 관리 필요"

총부채 비율이 선진국에서 가장 빨리 상승한 이유는 분모인 GDP가 분자인 부채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다. 2014~2024년 11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이 국가 채무 증가율을 넘어선 해는 세차례 뿐이다. 2017년, 2018년엔 경제성장률이 0.2%포인트(p), 0.7%p 앞섰다.

민간 부채도 급증했다. 2021년 GDP의 100%(98.7%)에 육박하던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89.5%까지 감소했지만, 부채 규모는 472조원(25.8%)까지 증가했다. 기업 부채도 912조원(46.8%)증가하면서 2019년 GDP의



100%를 밑돌던 기업 부채 비율이 111.3%까지 치솟았다.

부채의 질도 악화됐다. 한국은행이지 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,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 비중은 17.1%로 14년 만에 최고치였다.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았다는 것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. 중소기업만 따지면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17.4%에서 지난해 18.0%로 0.6%포인트(p) 올랐다.

금융권관계자는 "소수 대기업을 제외하면 기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는데도 정부는 실업률 상승을 우려해 구조조정에 손을 대지 않았다"며 "그 결과 빚으로 빚을 막아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급속히증가했다"고 말했다.

◆ 생산적 금융 기조에 기업대출 ↑

은행들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.

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(KB국민· 신한·하나·우리·NH농협)의 지난달 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675조8371억원으 로 전달 말(671조877억원)보다 4조7494 억원 증가했다. 아직 올해 하반기가 끝 나지 않았지만 6월 말(664조868억원) 대 비 11조원 7503억원 급증했다.

은행권에서는 최근 중소기업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현상을 정부의 '생산 적 금융' 확대 기조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. '생산적 금융'이란 금융사가 단순히 대출을 통해 이자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혁신 기업이나 중소·벤처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.

中企 내 한계기업 비중 18% 달해 주요 은행, 中企 연체율 증가 추세 "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반증"

다만 정부기조에 경기침체까지 겹치 면서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이 우 려할 만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.

3분기 국민은행의 연체율은 전 분기 0.42%보다 0.12%P 상승한 0.54%로 나타났다. 이는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.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중소

기업 대출 연체율은 국민은행보다 더 높은 0.56%를 기록했다. 모두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. 신한은행만 유일하게 3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이 0.45%로 0.5%를 밑돌았다. 농협은행 연체율은 1분기 0.96%, 2분기 0.70%보다 내렸지만 5대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0.58%를 기록했다.

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가장 많은 IB 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1. 03%로 2010년 3분기 1.08%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. 중소기업 연체율이 뛰면서 기업은행의 모든 대출(가계대출 포함) 연체율은 1.00%로 치솟아다.

은행권 관계지는 "최근 생산적금융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나는 추세가 연체율 증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 을 줬다고 본다"며 "중소기업 연체율 증 가는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다"고 말했다.

/나유리 기자 yul115@metroseoul.co.kr

GDP 대비 기업대출 111%… 외환위기 수준

>> 1면 '가계-기업-금융'서 계속

올해 2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은 89.7%로 1분기(89.4%)와 비교해 0.2%포인트(p) 올랐다.

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말 98.7%로 100%에 육박했지만, 최근 2년 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분기엔 89.4%까지 내려갔다가 2분기에 89.7%로 반등했다. 올해 4~6월 집값 상승 기대감에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.

◆ 가계·기업대출 부실 우려 ↑

그러나 앞으로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. 외환위기 당시 108.6%였던 GDP 대비 기업대출은 올해 1분기 111.3%로 상승했다. 가계부 채가 줄지 않는 가운데 기업부채까지 되레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.

여기에 정부는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

으로 기업대출 비중을 더 키우려 하고 있다. 부동산이나 가계부채로 쏠리는 자 금을 혁신기업, 첨단기업, 사회기반시설 (SOC) 등 실물경제 성장 부문으로 경제 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의도다.

거듭된 내수 부진 속에 대출 이자조차 못 갚는 한계기업 비중은 14년 만에 최 대 수준까지 확대됐다.

한국은행이지난9월발표한보고서에 따르면,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기업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 비중은 17.1%로 14년만에 최고치였다. 이자보상배율이 1을밑돌았다는 것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. 중소기업만 따지면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17.4%에서 지난해 18.0%로 0.6%p 올랐다. 가계·기업·금융이 서로의담보가 된 구조에서 위기는 '연쇄'가 아니라 '동시'에 올 수 있다.

